

최종보고서

2017 인권모니터링 보고서

1. 세부활동내용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 참여자수)
1	인권 아카데미	인권 모니터링 자치기구 참여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4월 2일 장소: 달그락달그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과 참여(정건희 소장) - 청소년 인권 이야기(이충민 조사관) 	1회/3시간/ 19명 참여
2	전라북도 일간지 분석	전라북도 학생인권 기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4월~11월 장소: 달그락달그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에 대한 기사 조사 - 권리별 기사분류 및 빈도 분석 	8회/32시간/ 36명(연인원)
3	인권 관련 정책제안 활동	청소년의 인 권보장 및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명: H.P (인권참여분과, Human right Participation) 활동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선일 18세 선거권지지 및 투표독려 캠페인 진행 · 분과회의를 통한 인권과 참여 분과 연간 계획 작성 · 각 정책안전별 자료조사(관련 시행법, 타 지자체 해외 사례조사) · 청소년 인권거리조성에 대한 현장 답사 · 청소년이 상상한 청소년 행복마을 구성 및 운영방안 포럼 발표자로 참여 	10회/ 200명(연인원)
4	학생인권 정책반영 토론회	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사회 모습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안한 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7월26일 장소: 달그락달그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선언 및 취지안내 (김경희 위원장, 청소년실천연구위원회) - 기조발제 : 청소년 인권과 참여 (정건희 소장, 청소년자치연구소) -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의 몇가지 이슈 (이충민 조사관, 전북교육청학생인권센터) · 지역사회청소년인권 (강성옥 시의원, 군산시의회) · 폭력과 학교 (조성원 변호사, 조성원 법률사무소) · 청소년 참여활성화 (김기쁨 청소년,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1회/ 70명 참여/ 전문가 5명/ 보도자료 3회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 참여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권보장(권성주 청소년, 달그락 인권자치기구, 2017 군산시 청소년의회) - 전체 토론 	
5	인권알기 탐방	인권감수성 향상 및 법에 대한 이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17일 ▪ 장소: 달그락달그락, 군산 법원, 변호사 사무실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모의재판 준비 및 진행, 인권침해사례 발굴 - 법원 방문 및 판사와의 인터뷰, 재판 방청 -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및 변호사와의 인터뷰 	1회/8시간/10명
6	학생인권 참여포럼	지역사회 마을을 모니터링하 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제안점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활동 ▪ 일시: 8월15일, 20일, 27일, 9월3일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회의 · 1차: 추진위원장, 부추진위원장 선출, 참여포럼 계획서 작성 · 2차: 포럼 토론내용 선정 및 내용 구성, 진행, 홍보, 기획 TFT 팀으로 나누어 활동 · 3차: 책자 구성 및 분과별 토론문 작성 · 4차: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지도(안) 제작 	4회/12시간/ 80명(연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럼 ▪ 일시: 9월9일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발표 : 청소년 참여포럼의 의미와 활동과정(김기쁨 포럼 공동추진위원장) - 분과발표 : 소개 및 주요 논점 발표 - 분임토론 · 상상 미션문 (분과별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작성 ·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 지도그리기(지역구,동 구분을 통해 상상하는 정책안건을 논의) · 안전에 공간/인력/프로그램 으로 구분 	1회/ 60명참여/ 전문가 6인 토론지원/ 보도자료 2회

순	활동명	목표	주요내용	성 과 (회/시간/ 참여자수)
			한 스티커를 붙여 상상행복퍼즐(발표자료) 구성 - 분과별 발표 - 상상행복 퍼즐부착 '청소년이 상상하는 청소년 행복마을' 전체지도 구성 - 전문가 제언	
7	평가회 및 차후 활동 방안 모색	지속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9월9일, 9월23일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준비/ 진행 평가 - 청소년 정책제안 방안 논의 (청소년 정책을 표시한 상상행복마을 지도 구성) 	2회/ 4시간/ 20명 참여 (연인원)
8	인권상담 부스 운영	인권과 관련된 개인 사례 나눔 및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월28일 ▪ 장소: 군산대학교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대한 상담부스 운영 - 인권거리 조성에 대한 찬성 서명운동 	1 회 / 6 시 간 /10명
9	보고서 작성 및 제안	포럼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0월~11월 중 ▪ 장소: 달그락달그락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안 방법 논의 및 추진회의 - 포럼내용을 바탕으로 한 군산시 청소년 상상 행복마을 정책 지도 구성 - 정책 간담회 - 정책의제 설문조사 시행 - 청소년참여포럼 안건 정책제안서 작업 	3회 90명(연인원)

2. 과정평가

1) 인권아카데미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아카데미를 통해 인권 자치기구 2개가 형성되었고, 각 자치기구별 회의를 통해 회칙을 제정, 모니터링 활동계획을 마련 • 여러 학교 교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교사들의 협조가 가능하였고, 다양한 학교 청소년들이 인권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청소년의 인권 활동이 왜 필요할 지에 대해 강의하고, 군산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알려주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환경에서 인권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함 • 전체적으로 인권 자치기구 활동을 하기 전에 필요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 • 청소년들 간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와 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은 부족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기구를 구성한 뒤 자치기구별 청소년들의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기로 함 • 토론과 논의과정이 포함된 아카데미 구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아카데미 강사와의 정기적인 활동 피드백 및 교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2) 전라북도 일간지 분석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학교 내 인권문제에 대한 기사분석을 통해 월별 주요 이슈를 분석할 수 있었음 •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따라 월별 분석을 진행하여 현재 집중해야 할 인권과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음 • 전라북도 내 여러 지역을 고르게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직접 면담,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진행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지속적인 이슈 발굴에 따라 과제 해결 논의 과정 추가 필요

3) 인권 관련 정책 제안 활동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분과별(인권과 참여, 청소년문화, 청소년 경제, 복지와 안전, 교육과 진로)로 청소년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분류하고 청소년이 군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토론하는 정기 회의 및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 분과별 활동 공유를 통해 분과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변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정책안전발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향후 3월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활성화

<p>료조사활동, 인터뷰, 기획기사 보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상상하는 행복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활동의 장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 어린이 청소년 관련 예산서를 참고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2018년도 시행 예산 등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할 의제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음 • 분과별로 계획된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안건 분석, 각 분과별 활동에 대한 의미, 정책안건 구성 등을 주요 주제로 잡고 월2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분과에 속한 청소년들이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 가능하게 됨 • 기존에 진행되었던 자치기구 활동과 회의시간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일부 역할이 명확하지 않는 분과원들은 참석률이 저조함 	<p>하기 위해서는 각 분과장 및 부분과장의 임원 리더십 트레이닝과 같은 교육체계를 만들어 활동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분과 관련 전문가와의 만남 및 자문 시스템을 체계화 하여 정책 안건에 예산 및 진행 내용 등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4) 학생 인권 정책 반영 토론회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및 청소년 현장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문화 예술 계열의 전문가 토론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청소년정책 제시가 가능했음 • 분과활동을 진행했던 청소년들이 패널로 참여함으로써 분과내에서 청소년들이 논의한 정책내용을 전문가, 청중들과 공유 할 수 있었으며 발표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 현장답사 등을 실시 하는 등 정책에 안건에 대한 준비를 내실히 할 수 있었음 • 청소년 기자단의 기획 취재로 전라북도 전역에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포럼 참여자를 모집 하는 데에 성과가 있었음 • 한 분과당 10명에서 30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포럼에서는 시간적 한계로 2명의 청소년만이 대표로 발표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발제자 및 패널이 준비한 자료를 사전에 공유하여 정책안건에 대한 첨언 및 전체토론 질문을 준비 해오는 것이 포럼 참여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당일 토론회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 됨 • 분과 활동과는 별개로 달달포럼 추진에 대한 청소년 추진조직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만들어가고 섭외를 하면서 다수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분과에서 분과원이 함께 발표자료(발표우드락, ppt, 영상 등)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토론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이 정책으로 만들어 지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동기 부여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함

5) 인권 알기 탐방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활동 중 하나로 법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며 실제 법이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모의재판 진행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모의재판 준비과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평가 중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매우 그렇다’가 7명, ‘그렇다’가 1명,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피고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매우 그렇다’가 6명, ‘그렇다’가 1명, ‘보통이다’가 1명으로 나타났고 직접 시나리오 구성 및 각 역할 분담 진행으로 모의재판을 통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원고와 피고 입장에서 인권침해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 •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함으로써 조금 더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들 중 인권침해사례와 관련된 것임을 좀 더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매우 그렇다’가 7명, ‘그렇다’가 2명, ‘보통이다’가 1명으로 나타났다. 전과 비교하여 스스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더 인지하였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10명 중 7명을 차지하였음 •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윤리, 의무 등에 대해 청소년들이 질문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음 •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등 가해자를 바라보는 전문가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군의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인터뷰 하는 과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청소년들의 인권구호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필요 • 전문가들과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 • 모의재판 시 좀 더 많은 배심원들을 모집하여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 • 실제 전라북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이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을 기획하는 과정이 필요

6) 학생인권참여포럼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데미, 상상캠프를 통해 토론한 정책안건을 시각화하고 각 분과별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가 됨 • 각 분과 활동을 했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청소년들이 토론에 참여 하였고 기존 토론했던 내용에 정책 제안을 추가 할 수 있었음. • 표지제작, 상상행복마을 지도 제작, 신청서 구성 등 청소년들이 포럼관련 전반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것에 참여 하였고, 이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홍보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됨 • 17명의 청소년 추진위원단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었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담보된 포럼 진행이 가능하였음 • 분과토론 시간은 정책안건을 공간/ 인력/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것에 충분했음 • 기획-홍보-진행부서로 나누어 포럼을 준비했지만 기획부서 및 홍보부서의 역할을 초기에 명확히 분담하지 않아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는 내용이 미비했음 • 포럼 당일 진행 및 분과(분임) 토론이 빨리 끝나는 분과(분임)이 있었음. • 추진위원회 평가시 참여포럼 이후의 분과 활동을 이어가는 것(현장답사 및 전문가와의 자문)의 필요성에 대한 추진위원단의 평가가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달여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기간, 집중홍보기간, 토론준비기간 등 추진일정을 세분화 하여 진행한다면 많은 청소년의 참여와 토론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사전 토론문을 통해 나온 토론주제와 안건을 관련부서에 미리 보내 당일 토론에 집중할 주제를 고민해보게 하는 것에 대해 추진위원회의 평가가 있었음. 이를 통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 조율 필요(예: 포럼에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여, 자문을 하는 것 등) • 각 분과별로 향후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분과장이 참여포럼 내용을 주도적으로 알리고 평가해야 함 • 리허설을 2회이상 진행하여 시간 분배 및 준비 미비사항을 점검 할 수 있어야 함 • 분임(분과)토론이 계획보다 빨리 끝나는 분임(분과)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등을 사전에 제시

7) 평가회 및 차후활동 방안 모색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간담회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포럼 안건을 각 지자체 주무부처와 함께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군산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소수의 의견이지만 취합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참여포럼에서 제안된 정책안건 이후에 정책 발굴 갈 수 있는 체계(혹은 시스템) 마련(예: 차후 활동 세부 계획 수립, 역할 분담 등) •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더 많은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

8) 인권상담 부스 운영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의 고민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통해 교우 관계에서의 언어적 폭력, 성적에서의 차별, 왕따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됨 인권거리조성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청소년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알리는 계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인 토래상담 지식과 실전 연습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활동을 진행하거나 정보제공 중심으로 인권 활동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강점에 부합하는 방식이 필요

9) 보고서 작성 및 제안

과정평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포럼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상상하고 그리는 지역 사회 모습을 지도 형태로 표현하고자 함. 각 분과별 포럼을 통해 정리된 청소년 정책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도서형태의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럼에서 나온 청소년 정책 의제를 지속적으로 언론 및 온라인(SNS)를 통해 청소년 정책 의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해야 함 정책안건에 대한 학교별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제안서를 지자체와 함께 공유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함.(예: 토론회, 정책간담회)

3. 전라북도 일간지(신문, 인터넷 기사 등) 분석 요약 및 제언

전라북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은 전라북도 내 학생과 성인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조사와 인권문제 파악을 위해 진행하였다. 학생 자치조직 영역과 학생 연합활동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학생 자치조직은 학생이 접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권리조항들을 바탕으로 조사 및 공유하고 기사분석 및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주요 이슈 파악을 진행하였다. 학생 연합활동으로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제언, 해결력을 키워 지역 정책안이 지자체에 반영되는 활동이 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기사분석이 주된 활동내용이었으며 주로 논의된 권리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 등이다.

문화활동에 관한 권리는 꾸준히 기사 기고 되었다. 그 중 7월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권리 기사가 기재되었다.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문화체험, 월드문화 캠프 진행, 미국과의 청소년 교류단 활동 등에 대한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에 대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의, 전통문화 체험활동, 리더십 아카데미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 활동에 대한 기회가 제공되었고, 지역 청소년 축제, 학교 내 특이한 문화 활동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더하여 전주에서는 청소년들이 놀면서 자기주도력을 키우는 프로젝트 선정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놀이공간 확보에 대한 정책제안을 진행하는 등 놀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복지에 관한 권리는 5월에는 청소년 상담방문자 수 증가,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연 마련 및 교육, 마음치유 프로그램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소년소녀 가장 현장체험 제공, 소규모 학급 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활동 증진, 장애 학생 통학 어려움 등에 대한 일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진행되었다. 6월에는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전라북도 내 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참여 권고, 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공동체 활동, 청소년 놀이터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제안 등 전체적인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이나 변경이 있었다. 전라북도 뿐 아니라 경상북도에는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외, 제주도에는 일반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 프로그램 운영 등 대상의 폭을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였다. 산간지역 학교에서의 공동체 활동 지원과 같이 특정 지역적 소외로 인한 복지 활동이 진행된 것도 있었다.

한편 7월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이 시행되면서 급식 파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어려움이 화두가 되었다. 경찰청과 법사량위원회 등에서 일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지역별 이슈가 되었다. 한 후원자의 청소년들 지원 이야기와 청소년들의 지역 기여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 복지의 대상과 주체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주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8월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교육, 분노 조절 교육 등을 제공한

다는 내용이 나왔다. 현재 아직도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해 문제시 하는 지역의 인식이 표현되었다고 보인다. 청소년들을 선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점이 있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드림스타트 참여 청소년들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같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나 교과 내 시간이 아닌 0교시나 방과후를 활용하여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 그쳤다. 교육복지지원사업 대상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일부 청소년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지만 소규모 지역에서는 지역 간 연대와 소통을 위한 캠프 등의 활동이 계속하여 드러났다.

10월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가정문제, 성적 등으로 자살한 청소년의 수가 5년 간 20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적 복지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 근로 환경의 열악함을 밝혔다. 무상급식 단가 인상, 중학교 무시험 진학 등 지역별 청소년들의 복지에 변화를 알렸다.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일부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서는 학습, 체험, 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소규모의 지역에서는 공동체간 소통을 위한 활동들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내용으로는 무상급식,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권리로는 민간, 행정, 학교가 합동으로 5월경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펼치고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학교 주변 취약지역 순찰, 또래 지킴이 등에 참여하는 등 안전을 위한 움직임에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여름철 재난 사고를 대비한 학교 시설 점검을 진행하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특정 학교에서는 급식실 노후로 폐쇄를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반발이 있어 안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경찰서에서는 특정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충청도, 서울, 강원도 등에서는 청소년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공기 청정기 설치 확대나 미세먼지 대응 교육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슈로 제기 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며 건강을 해치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청소년들과의 소통으로 비행예방에 대비하는 경찰서의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등 청소년들의 안전을 침해당한 사고도 있었다.

6월에는 사고 위험 우려가 제기된 학교 앞에 안전한 통학로 개설, 사고없는 등하굣길 캠페인 등 등하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곳곳에 시행되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운전기사의 안전교육이 실시된 지역도 있었다. 등하굣길 취약시간대 집중순찰이 진행된 지역도 있어 범죄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통사고와 길거리 범죄 등 교외에서의 안전위협 외에 실습생 사고, 수학여행 중 빠른 응급처치 부족으로 인한 사고 등 일부 청소년들의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가 지속되었다.

이외에 일부 지역에서는 건강한 식사를 위한 요리체험이 관내 중학교 학생에게 제공되어 생활에서의 안전을 고려하는 지역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여름철은 식중독 사고 중

학교 집단 급식을 주의해야 하므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다. 농촌체험학습장·응급처치 안전교육이 실시되기도 하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 훈련이 실시되는 등 청소년 환경의 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해 고려하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고창과 부안군의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방사능 누출 시 대피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며 지역의 위치적 특색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로체험장에서의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과 같이 아직도 사전에 예방되어야 할 사고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의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토피·천식 등에 대해 안심기관을 두고 알레르기 질환(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선별조사를 통해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선별, 이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제공하는 권리 보장 활동도 있었다.

11월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안전 관련 경진대회(119뉴스, 심폐소생술 경연)가 열리고,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이 실시되는 과정도 지속되었다. 학교폭력 예방·위기학생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테크스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안전에 대한 권리는 청소년들의 주요 환경인 통학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이나 보호 활동,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과 환경오염정도, 현재 청소년들의 질병 정도에 맞게 대비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 된다면 좀 더 정확한 우선순위 선정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6, 9, 10월에 특히 많이 거론되었다. 6월에는 학생에게 빗자루를 던져 코뼈를 부러뜨린 교사, 10대 청소년에게 어플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돈을 챙긴 20대, 대걸레에 달린 알루미늄 봉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3명에게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송치됐지만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해 불기소 처리된 교사, 청소년이 청소년을 살해한 사건 등 다수의 폭력 사건들이 일어났다. 폭력의 가해자는 교사, 20대 성인, 청소년 등으로 다양했다. 가혹한 신체폭력부터 성폭력까지 아직도 청소년들이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청소년 범죄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9월에는 소년법 폐지, 개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 폭력이 증가했다는 보도도 제시되며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제어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범죄의 정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10대를 성매매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며 청소년들의 성매매 노출에 대한 재판부의 가해자 처벌의 정도가 여전히 낮음을 알 수 있다.

10월에는 여중생이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 간 폭력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학교폭력, 전주에서 벌어진 중학생 자살사건, 성추행의혹을 받고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송경진교사 자살사건 등으로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어 폭력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묻기도 했다. 중고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으나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숨진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

감이 피해자 유족에게 “문제가 있다면 형사고발 하라”고 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폭력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교육환경이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주 여중생 투신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하여 예방의 가능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예방 대책과 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북도교육청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부안 여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타 학교에서의 성추행 여지 점검보다는 폭력이 이루어진 뒤 그 학교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에 비해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응답 건수 대비 후속조치 건수가 1차 실태조사(3~4월) 9.4%, 2차(9~10월) 12.7%에 그쳤다고 한다.

학습에 대한 권리는 5, 7, 8, 10월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고, 한편 방과후 학교가 강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프로그램의 다양성부족, 질적 하락 등을 이유로 매년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교사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5월에는 국정교과서가 폐기되었고, 인성교육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7월에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최해 긍정적 사고, 공동체 의식 등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캠프를 제공하는 지역이 있었고,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학생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 모험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자유학기제를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분야와 성공담을 들려주어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명사특강 제공, 청소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학습이 기회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학교에서도 교수들과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이공계열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진로교육과 직업적성검사 등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로교육 전용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8월에도 지역 선배인 대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을 통한 진학 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 있어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학습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월에는 전라북도 청소년들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청소년들의 학습의 권리에 대해 살면서 기본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긍정적 사고, 공동체 의식, 역사의식, 리더십, 인성에 대한 교육환경에서의 움직임들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학습의 권리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권모니터링 사업의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실제 참여하는 인권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어떠한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지, 대안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권모니터링 사업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 한계를 극

복하고자 기사분석이 주로 진행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모집하여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참여한다면 지역 인권 모니터링의 편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모니터링 사업에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거나 교사와 인권 전문가, 학생을 구분하여 진행하기 보다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 인권을 함께 다루고, 교육이라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과 교사, 지역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학교 안 학생에 한정되고, 보호해주어야 하는 책임자가 교육자나 인권전문가 또는 부모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화를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권모니터링을 통한 인권 이슈 발굴에 따른 연계 활동이나 후속 활동이 사전에 함께 기획되어 조사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권리별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지속적인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다수가 낼 수 있는 인권모니터링 과정이 필요하다. 인권아카데미, 인권관련 기관 탐방, 인권 전문가와의 만남, 정책제안 토론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포럼, 기사분석,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을 함께 활용하며 다수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주면 지역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반영할 기회가 높아질 것이다.